태양광 사업 국내 최초 마을 주민이 주도… 수익도 '짭짤'

산업부, '햇빛두레 발전소' 추진
10곳 선정… 최대 15억 금융지원
1인당 연간 최대 60% 수익 전망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뉴시스

마을 단위로 주민이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의 마을 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마을공동체 주도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 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이 이달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된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경우,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에너지경제연구원 발전원가 산정 기준 반영, 설비용량 1㎿, 총사업비의 90%(15억원) 금융지원, 주민 30인, 주민지분율 60% 등을 가정한 최대치"라며 "실제 경제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하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1㎾의 바 전사업허가가 있어야 하고,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11월9일~12월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참여마을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9일 산업부 및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건설현장 동절기 질식·화재 예방 팔 걷어

고용부, 관리 부실현장 집중 감독
점검표에 사업장 대표 서명 받아야

정부가 겨울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을 집중 감독한다. 정부는 이 시기에 난로 사용 등에 따른 질식과 화재, 폭발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동절기를 맞아 8일부터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대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갈탄난로를 사용하다 노동자 4명이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019년 1월에도 경기 시흥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갈탄난로 사용 도중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우선 대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현장 중심으로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규모 건설 현장은 가설 건축 구조물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를 지키지 않은 현장을 중심으로 감독한다. 2019년 기준 가설 건축 구조물 안전조치가 미흡해 숨진 노동자만 162명이었다.

고용부는 각 건설현장에 자율 점검표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점검표에는 대표이사 서명을 받도록 해 대표가 직접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각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직접 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챙겨봐야 한다"며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하청업체와의 협력, 근로자의 참여,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얀센 부스터샷 접종 시작 얀센 코로나백신 접종 2개월이 경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 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얀센 접종자가 추가 접종을 받고 있다. /뉴시스

'1회 산업혁신인재위크'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

전국 80여개 공과대학 학부와 대학원생이 기업과 협업한 연구 성과를 경연하는 자리가 온·오프라인으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12일까지 온라인 E2스튜디오(www.e2festa.kr)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산업혁신인재양성 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토대이자 산업혁신을 이끌 공학 인재들이 현장형 교육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축제의 장이다. 기존 학부(공학 페스티벌)와 대학원(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으로 분리 운영되던 행사를 올해부터 통합해 확대 개최된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공학 페스티벌은 전국 80여개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현장형 교육을 통해 학부생이 제작한 시제품 경진대회와 청년의 끼와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UN 등 국제기구 취업 정보 '한 눈에'

산업인력공단-코트라 등 공동 주최
13일 온라인 웹세미나 형식 설명회

오는 13일 국제연합(UN),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 관련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합동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열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주미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공동으로 13일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웹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후 2시부터 5시, 한국 시간은 13일 오전 3시부터 6시까지다.

행사는 1부 취업설명회와 2부 멘토링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1부에선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미주개발은행(IDB) 등의 인사 담당자와 국제기구에 취업한 선배들이 참여해 취업 정보와 취업 성공스토리 등 노하우를 들려준다.

최영수 뉴욕주 변호사는 미국 취업 시 취업비자 제도 등 이민법에 대해 설명한다.

산업인력공단은 해외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 주는 해외취업정착지원금도 소개한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해외 취업에 성공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소득분위 및 취업기준 자격을 따져 선진국 최대 400만원, 신흥국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2부에선 기관별로 온라인 방을 개설해 국제기구 선배들이 한국 후배들에게 국제기구 취업을 위한 심층적인 멘토링을 해 준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위한 많은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한국호야렌즈, 대리점에 '갑질' 적발

공정위, 과징금 5700만원 제재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 할인판매점 등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지역을 할당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원을 부과하고,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는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직거래 안경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해 안경렌즈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또 대리점에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와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특히 물품공급계약시 대리점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설정된 영업지역은 대리점의 영업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거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와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2015~2019년까지 5년간 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한 대리점(총 31개)을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세종=한용수 기자